

원내 주요 3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녹색당의 주요 정책 비교



2016. 4. 1.

녹색당 총선 정책본부

원내 주요 3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녹색당의 주요 정책 비교

2016. 4. 1. 녹색당 총선 정책본부

1. 개요

- 녹색당은 20대 총선이 ‘정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정책 쟁점들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한국 사회를 바꾸는데 필요한 11가지 핵심적인 정책 의제들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중심에 놓고 녹색당은 주요 원내 4당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번 비교·분석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유권자들에게 현명한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 녹색당은 이 비교·분석이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니고 있다고 자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거대 기득권 정당들의 정책 프레임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평가·분석이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녹색당은 대다수 시민·유권자의 필요와 희망을 담고 못하고 있는 기존의 정책 프레임을 넘어서고자 부단히 시도하고 있다. ‘객관성’이나 ‘중립성’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향한 ‘절박함’이다.

2. 비교분석 방법

1) 정책의 기초와 우선순위 비교

- 각 당이 언론에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한 자료를 중심으로 정책공약 기초를 파악했다.
- 각 당의 핵심정책 및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등록된 자료를 파악했다.

2) 핵심 정책 비교

- 비교하는 정책분야는 녹색당이 제시하는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선택하였다. 녹색당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른 정당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분석한 것이다.
- 비교·검토하는 타당의 정책 공약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10대 정책공약과 각 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책 공약, 시민사회단체의 공약 검증 토론회 내용, 그리고 기사 검색을 통해서 확인된 공약 내용을 기준으로 삼았다.

3. 각 당의 정책 기조와 방향

1) 새누리당¹⁾

○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의 비전과 대표공약은 아래와 같다.

- 비전: 활기찬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 반듯한 대한민국
- 대표공약:
 - 일자리 더하기: 내수산업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 부담 빼기: 의료비·사교육비·가계금융·노후부담 완화
 - 공정 곱하기: 계층이동 사다리 구축, 대중소기업 상생
 - 배려 나누기: 주거권 보장, 건강권 확보,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나눔 문화 확산

2) 더불어민주당²⁾

○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 목표, 3대 비전 그리고 7대 약속은 아래와 같다.

- 목표: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 3대 비전: 더불어 성장, 불평등 해소, 안전한 사회
- 7대 약속: ①좋은 일자리창출과 행복한 민생경제, ②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완성, ③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④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성장 동력 확충, ⑤전국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⑥평화로운 한반도와 안전한 사회, ⑦국민의 인권 보장과 민주주의 회복

3) 정의당

○ 정의당의 총선 기조와 4대 정책과제는 아래와 같다.

- 기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 우리 사회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이번 총선거조를 ‘같이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했고요. 그래서

1)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보도자료(2016. 3.21), “제20대 총선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발간”
2)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보도자료(2016. 2. 18),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1%를 위해서 99%를 불모로 잡는 기득권 경제를 혁신해서 민생을 살리는 정의로운 경제, 또 정의로운 복지방안을 제시했습니다.”³⁾

- 4대 정책과제: 정의로운 경제/정의로운 복지/정의로운 전환/기득권 해체

4) 녹색당

○ 녹색당의 총선 정책 기조와 방향은 아래와 같다.

- 기조: 성장 중독 탈출, 행복이 우선이다.
- 5대 방향
 - 쉼표와 마침표가 있는 사회_노동 중독 사회를 넘어, 기본소득을 통한 삶의 재구성
 - 보다 자립적인 지역 그리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전환
 - 핵발전 및 기후변화 위협에서 벗어나고, 모든 생명이 있는 그대로 존중되는 사회
 - 서로 존중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평등한 호혜 공동체 구성
 -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평화의 구축과 지구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

5) 각 당의 정책 기조와 방향 비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활기찬, 행복한, 안전한, 반듯한 대한민국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같이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성장 중독 탈출, 행복이 우선이다.
성장 중심 복지 보완	성장·복지 균형 추구	복지 중심 성장 추구	탈성장·복지 추구

4. 선관위 등재 10대 정책 비교

○ 녹색당은 2015년 6월부터 정책공약개발단을 구성하고 당원들로부터 정책 의제를 제안받았으며, 9월에는 정책대회를 열어 당원뿐만 아니라 각계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공약을 개발해왔다. 이를 통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루어져야 할 11대 정책 의제를 선정하였다(구체 항목은 아래 표 참조).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꼭 다루어져야 할 의제들이라고

3) 2016년 3월 9일.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심상정 발언.

판단하고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각 정당으로부터 10대 정책 공약을 제출받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다. 각 정당이 제출하는 10대 정책은 해당 정당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녹색당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는 11대 정책 의제를 기준으로 각 정당들이 해당 의제에 대한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내용의 적절성은 고려하지 않았음).
- (1)새누리당은 노동, 주거권, 교육/배움 등 3개 분야에서 공약을 제시하였으며, (2)더불어민주당은 노동, 성평등, 주거권, 교육/배움, 한반도·비핵평화 등 5개 분야에서 공약을 제시하였다. (3)정의당은 동물복지·동물권을 제외한 10개 분야에서 공약을 제시하였다(아래 표 참조)

표 1. 녹색당의 11대 핵심 의제 기준, 원내 4당의 선관위 제출 공약 현황)

구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1. 탈핵·기후보호	×	×	○
2. 노동	○	○	○
3. 농업·먹거리	×	×	○
4. 성평등	×	○	○
5. 이주민·장애인 인권	×	×	○
6. 주거권	○	○	○
7. 동물복지·동물권	×	×	×
8. 교육/배움	○	○	○
9. 탈토건 안전사회	×	×	○
10. 한반도 비핵평화	×	○	○
11. 민주주의 회복	×	×	○
의제를 언급한 수	3	5	10

- 그러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 10대 정책공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제들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동적이거나 기회주의적인 내용을 포함한 경우가 많다.
- 새누리당의 노동 공약의 경우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여성단체들로부터 전면 개정을 필요성을 지적받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성공적 시행’을 공약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해당 의제에 관해서 어떤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 분석이 필요하다.

5. 녹색당 11대 핵심 의제에 대한 타 당 정책 비교

- 녹색당의 11대 핵심 의제 중에서 다시 몇 가지 (세부) 의제를 선별하여 다른 정당들과 녹색당의 정책공약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 비교는 (1)원내 4개 정당 정책과 모두 비교하는 5개 의제—경제성장론, 에너지·기후변화, 교육(배움), 청년, 직접민주주의와 정치 참여 확대, (2)보수양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책과 비교하는 6개 의제—노동·일자리, 여성·성평등, 차별금지법·동성혼 법제화(성소수자정책), 설악산 케이블카(산지개발), 동물권, 미세먼지 (3)원내 진보정당(정의당) 정책과 비교하는 1개 의제—평균월급 300만원—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번호	정책 분야	비교 정당
1	경제성장론 vs 탈성장 모색론	새누리당, 더민주당, 정의당
2	에너지·기후변화	새누리당, 더민주당, 정의당
3	교육(배움)	새누리당, 더민주당, 정의당
4	청년	새누리당, 더민주당, 정의당
5	직접민주주의와 정치 참여 확대	새누리당, 더민주당, 정의당
6	노동·일자리	새누리당, 더민주당
7	여성·성평등	새누리당, 더민주당
8	차별금지법·동성혼 법제화(성소수자정책)	새누리당, 더민주당
9	케이블카(산지개발)	새누리당, 더민주당
10	동물권	새누리당, 더민주당
11	미세먼지	새누리당, 더민주당
12	평균월급 300만원 vs 기본소득 40만원	정의당

1) 경제성장론 vs 탈성장 모색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① 각 당의 정책 개요

- 새누리당의 경제성장론은 ‘일자리 중심 성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내수산업 살리기
 - U턴 경제특구 설치
 - 문화체험·산악관광 인프라 조성, 지방관광 활성화, 교통시스템 구축
 - 동북아 해양관광의 메카로 육성
 - 노동시장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동력 확보
 - 면세점 특허기간 10년으로 연장
- 미래 성장동력 육성
 - 중견기업 수출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기업화 지원
 - 중소기업 특허·기술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 기반 제공
 -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 일몰조항 폐지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제도
 - 중소기업 공공구매 대상기관 확대
 - 자본시장 구조개혁으로 중소벤처 자금공급 확대
 - 지역산업과 연계된 규제프리존 운영, 창조경제혁신센터 강화
 - 19대 성장동력·5대 고부가가치·초혁신·삶의 질 향상 분야 지원 확대
 - 바이오, 나노 기술 개발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성장론은 ‘더불어 성장론’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년경제 활성화: 청년일자리 70만개, 셰어하우스형 공공임대 5만호 제공
- 비정규직 차별 철폐: 동일노동·동일임금, 사유제한제 도입
- 소득불평등 완화: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확대, 적정임금제·임금분포공시제 도입
- 상생협력을 통한 공유가치창출: 이익공유제 전면 확대
- 미래산업 선점: 핵심 신산업분야 집중 육성

4)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더불어 성장론’ 보고서』

- 혁신중소기업 육성: 과학기술부총리·중소기업 R&D특별회계
- 한반도 신경제지도: 남북경협 통한 성장률제고와 일자리창출
- 제2차 국토균형발전: 지역특화 국가전략산업클러스터 집중지원, 국토균형발전시도지사 협의회 및 국토균형발전차관 신설
-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 도농상생: 푸드플랜 전국 확대

○ 정의당의 경제성장론은 ‘정의로운 경제’⁵⁾이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민 평균월급 300만원 실현: 최저임금 1만원, CEO 임금상한제, 원하청 초과이익공유제
-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비정규직 제한, 해고 규제, 노동시간 단축, 성별 격차 해소
- 청년 일자리와 주거권 보장: 5% 청년고용할당제, 청년디딤돌 급여, 고시원/옥탑방 탈출
- 농민·상인·지방 살리는 경제: 식량자급률 법제화, 골목상권 보호, 지역특화산업 육성
- 미래를 향한 혁신 경제: 사회적경제, 강소기업, 복지경제, 평화경제, 탈핵경제
- 정의로운 재벌 개혁: 재벌의 불공정 갑질, 골목상권 진출, 지배구조 개혁
- 정의로운 조세개혁: 법인세와 소득세 강화, 사회복지세와 탄소세 신설
- 정의로운 노사관계 개혁: 사회적 논의기구, 산별교섭 제도화, 노조 교섭권 강화

② 분석 및 비판

가. 새누리당: 기업중심 성장론과 숫자 중심의 일자리 정책

○ 실현가능성이 불분명한 일자리 정책을 명분으로 전국을 탈규제의 불평등과 위협 지대 그리고 외부인의 눈요깃거리 관광지로 전략시킬 것이다.

— 해외 진출 기업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해 세제지원, 규제완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파견근로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함.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U턴하여 정착할 가능성도 낮거니와 설령 정착한다 해도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기간제나 파견제 등 불안정 일자리에 그치게 될 것이다.

— 관광산업을 활성화를 이유로 개발 수요가 생긴다면 생태계 및 지역공동체를 파괴할 우려가 크다.

5) 정의당, 「‘정의로운 경제’의 비전과 과제」 2016년 2월 18일.

나.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성장론 = ‘소득주도성장론’

- 더불어성장론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론이다.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소득불평등의 심각성과 이를 임금 상승으로 완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한다. 그러나 가계소득 증가가 소비 증대나 투자 증가로 이어져서 경제성장도 일어날 것이라는 소득주도성장론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 소득주도성장론은 불평등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평가하면서 기업의 이윤보다 가계의 소득(임금)을 증가시켜 성장과 분배를 이루자는 게 요지다(* 소득증가 → 소비증대 → 기업매출 증가 → 투자 및 고용 증가 → 경제성장 → 임금상승)
- 그러나 폭발 직전에 있는 가계부채로 인해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도 부채탕감에 우선적으로 사용되거나 중산층 이상의 경우 금융자산(연금, 보험 등)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소비 증가나 생산적 투자 증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 한편 소득주도성장론은 불평등의 심화가 노동소득분배율(국민소득에서 임금 몫이 차지하는 비중)의 하락에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원인은 대체로 노동자의 협상력 약화, 사회복지 축소, 국제금융자본의 임금상승 억압 등에 있다. 그렇다면 해법은 노동시장 규제완화를 억제하여 노동자의 협상력과 조직율을 높이고 복지를 확대하며, 금융시장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언급이 없다.
- 소득주도성장론의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 성장의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생산에 투입할 자원의 한계와 생산·소비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의 생태계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소득을 증가시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경제성장이 다시 소득을 증가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양극화를 초래한 자기 책임의 반성 없는 양극화 해소 정책

- 기업소득은 늘고 가계소득이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 꼽은 “재벌·대기업 위주의 감세정책과 규제완화”의 주범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소득세 인하, 고가수입품 특별소비세 폐지로 양극화를 확대시켰다.
- 또한 노무현 정부와 여당은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중산층·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당사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했던 김현중은 한미FTA 협상 당시 한국 측 협상 대표로서 “미국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죽도록 싸웠”던 인물이다. 이런 사람을 영입한 더불어민주당의 “중산층·서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의 진정성에 의

구심이 든다.

- 더민주당이 현 정부의 노동개약에 반대하고 있으나 2006년에 통과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자신들의 작품이었다. 그 결과 온갖 형태의 비정규직이 급격히 늘었으며 양극화는 확대되고 내수도 침체되었다. 하지만 당시 참여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화와 고용불안정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여 수많은 열사가 생겨났고, 구속된 노동자가 1천명이 넘어 문민정부 시절보다 오히려 늘어났었다.

다. 정의당: 정의경제론 = 소득주도성장론

- 정의당의 정의경제론에는 더불어민주당보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동일한 ‘소득주도성장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소득주도성장론의 한계를 공유하고 있다.

③ 비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 일자리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제시	▲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해법을 제시하지 않음	▲ 성장에 대한 강박에서 자유롭지 않음. 자원과 지구생태계의 한계에 대한 고려 부족	▲ 성장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동안 우리가 생산해낸 부로도 충분히 골고루 나눌 수 있다는 접근
기업 중심 성장론	소득주도성장론		탈성장의 모색

2) 탈핵에너지전환과 기후변화 대응: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① 각 당의 정책 개요

○ 새누리당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공약은 아래와 같다.

- 19대 성장동력·5대 부가가치·초혁신·삶의 질 향상 분야 지원 대폭 확대
- 5대 고부가가치분야: 태양경제, 수소경제, 탄소경제, 물경제, 지능경제 등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분야에 집중 투자
- 바이오, 나노 기술 개발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 기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발전, 신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에너지 신산업 육성
-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6대 핵심기술 분야(태양전지, 연료전지, 이차전지, 바이오에너지, 전력IT, CCS) 집중 지원
- 원자력 안전을 위한 환경구축, 방사능 재난 예방 및 모든 정보 원칙적 공개
- 방사능 재해로부터 신속히 국민을 보호하는 재난대응 인프라 구축
- 향후 원전 해체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실효적 대응체계 정비
-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 새롭게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의 차질없는 이행 지원
- 원전 관리·운영체계의 근원적 개선 및 원전에 대한 안전 심·검사 강화를 통해 원자력 안전 최우선 환경 조성
- 신속하고 효율적인 생활방사선 대응체계 구축 및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 강화
- 원자력 안전 관련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방식으로 전환 등 대내·외 소통 역량 강화
-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 및 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실현
- 온실가스 감축: 비산업부문 사업장(가정·상가·학교 등)의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및 노후시설 교체 유도
- 친환경차 보급: 친환경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급, 구입단계 세금 감경

○ 더불어민주당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은 아래와 같다.

- 고부가가치 창출 7대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기후변화협약 등 온실가스 감축 대응 친환경 에너지산업 육성
-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 저장용 중대형 리튬이차전지산업, 노후 원전 해체산업, LED, 스마트그리드(송배전기기 등) 등
 - 에너지공급 중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35년까지 20%로 높이고 ‘발전차액지원 제도’병행 실시 등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2035년까지 에너지 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확대
- 신재생에너지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폭 강화
 -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현재 운영되는 RPS(공급의무화제도)를 FIT(발전차액지원제도)와 병행 추진
- 신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도모
 - 원전 재앙 없는 나라에서 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여 원전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인사권, 예산권을 별도로 부여하여 철저한 안전감시책임과 의무부여
- 인적 구성에 있어 여·야간 균형을 맞추고 상근직 위원 확대 추진
 - 발전용 원자로의 건설·운영·수명연장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건설·운영 허가 등 중요 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 강화

○ 정의당은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은 아래와 같다.

- 노후원전 문을 닫고 신규원전 짓지 않겠습니다.
- 전력소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겠습니다.
- 재생에너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핵재처리를 금지하겠습니다
- 방사능 식품으로부터 국민식탁 지키겠습니다.
- 환경성과 사회성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수립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 국민들이 따뜻한 나라,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법 제정
- 기후적응법 제정을 통해 기후변화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적응 강화

② 분석

- 새누리당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정책 등을 지지하는 ‘찬핵’ 정책을 가지고 있다(핵없는사회를공동행동 질의 답변서).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은 주로 경제·산업정책과 안전정책의 일부로서 제시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등 탈핵 정책에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핵없는사회를공동행동 질의 답변서).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은 주로 경제·산업정책과 안전정책의 일부로서 제시하고 있다.
- 정의당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등의 탈핵 정책 등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정책을 제시하면서 <한국탈핵 2040: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③ 비판과 비교

-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거대양당은 찬핵의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나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의 문제도 에너지전환의 관점이 아니라 현행 경제 체제 내에서 모색하는 새로운 산업적 기회의 측면에서 일면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신규·노후 핵발전소의 폐쇄, 온실가스 목표의 재설정, 도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사회적·환경적 비용 반영 등의 근본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한국 경제 전반의 변화를 추구하는 ‘경제 녹색화’ 전략과 연계하고 있다.
- 정의당은 탈핵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거대 여야 정당과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비전과 체계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 즉,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의 연계점이 모호, 지역에너지 체계 구성의 부족, 재생에너지 갈등에 대한 인식 부족, 남북 재생에너지협력 구상 등이 부족하다.

3) 교육(배움) 정책: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① 각 당의 정책 개요

- 새누리당의 교육정책은 ‘교육을 희망사다리’라는 슬로건 아래에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활용 지식멘토링 확대
- 무료 온라인공개강좌로 맞춤형 고등교육 제공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기업맞춤형반 운영
- 전문대학 특성화
- 교육방송 조기 실시
- 수학 및 S/W 체험관 설치

- 더불어민주당의 교육정책은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고등교육재정 확대,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세액공제
- 고교체계 혁신, 기회균형선발 확대
- 고교무상교육 실현, 친환경 무상급식 정부 지원
- 학급당 학생수 감축, 기초학력책임보장법·혁신교육지원법·교육공무직법 제정
- 고교 수강신청제 도입,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정원확대
- 노후학교 시설 개선
- 국립대 총장 선출 자율권 보장, 비리사학 퇴출

- 정의당의 교육정책은 “수저계급론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에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 국고지원으로 막힘없는 누리과정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 2020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 국가표준등록금제 도입으로 진짜 반값 등록금
- 고른 기회 대입전형 2배 확대

- 대학 균형발전과 대학 서열화 해소
- 일반고 강화로 고교 서열화 해소
- 고졸 취업장려금으로 학력간 임금격차 완화
 - 창의력과 인성이 자라는 학교
- 쾌적한 친환경 건물에서 공부하는 선진학교
- 중학교 2학년부터 한반 25명, 개개인 맞춤형 교실
- 선생님의 행정업무 경감, 창의·인성지도에 전념
- 초등학교 혁신학교 2배 확대로 미래교육 환산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확대로 스스로 공부법 신장
- 수능수학 절대평가로 자녀의 생각하는 힘 키우기
-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와 다양한 역사교과서
- 학교와 동등하게 학원 선행학습 금지
 - 안전하고 건강한 배움터
- 재난위험시설 완전 해소, 유해물질 없는 운동장
- 아동학대근절 신고시스템 정비
- 학교폭력 없는 배움터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2배 확대
 -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교육
- 학생인권과 교권의 상생, 학부모 권리 보장
- 노동인권 등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총장 직선제는 대학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
- 헌법과 국제표준에 따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 깨끗하고 투명한 사립학교로 학생중심 교육

② 분석 및 비판

가. 새누리당

- 전체 총선 정책 가운데 교육 관련 정책의 비중 및 중요성이 낮으며, 교육정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나 목표가 분명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내용은 없이 정치적 중립과 교육감직선제만 이야기하고 있다.
- 교육을 계층상승의 도구로 인식하는 자유주의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교육정책은 교육기회 제공을 내세워 지역적 내용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전체적인 통일성과

각 정책 간 정합성이 없다.

- 저소득층에 대학생 과외, EBS 과외, 온라인 대학강좌 확대, 기업맞춤형 교육, 수학 및 S/W 체험관 설치 등 이미 실시 중이거나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정책들을 그대로 나열하고 있다.

나. 더불어민주당

-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재정 문제로 환원하거나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등 자유주의적·도구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만 하면 저마다 능력을 계발하여 직업적 성취와 신분상승을 이룰 수 있다는 순진한 사고방식은 학교 및 직업에서 성패를 오로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에 경쟁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경쟁을 부추기게 된다. 교육은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아니었음은 진작 판명되고 있다.
- 교육은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도 없으며 그래서 안 된다. 교육은 신분상승의 ‘도구’가 아니라 개인의 전인적 성장과 계발 그 자체이다.
- 초중등교육의 핵심 문제인 학교서열화와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고려와 해법이 없으며, 지역적인 재정지원 정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 정의당

- 교육을 복지의 하위 문제로, 즉 교육 자체의 고유한 목표와 가치를 지닌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을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주자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정의당은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다시 놓겠다”는 자유주의적·도구주의적 입장으로 퇴행하고 있다.
-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일은 그 자체로 옳은 일이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채 학교 바깥에서 교육기회를 박탈당한 청소년들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교육기회 보장이 의미를 가지려면 교육제도를 둘러싼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력이 따라야한다. 물론 이는 교육정책으로 해소될 문제는 아닐 것이다.

③ 비교

-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을 교육을 계층이동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자유주의적, 도구주의적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반면에 녹색당은 사회경제적·생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과 사회가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의당은 진보정당으로서의 교육문제에 대한 성찰과 장기적 비전, 큰 밑그림을 그려내는 역할에서 대폭 후퇴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 한국 교육의 모순과 교육으로부터 발생하는 고통에 대한 성찰보다 현상적으로 드러난 교육 문제에 대한 단편적 대응 중심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 문제의 고통을 비용과 복지 문제로만 환원하고 있다.

4) 청년정책: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① 주요 내용

○ 새누리당의 청년 관련 공약의 내용 중 대표적인 것은 아래와 같다.

-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중소기업 취업자 중
- 청년기본법 제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근거 확보
- 청년희망아카데미 확대
- 청년국제인턴 확대, 벤처장학제도
- 청년예술가 일자리 지원: 기업 문화예술사업과 연결
- 행복주택 지속공급으로 청년층 주거불안 해결
- 기숙사 그린 리모델링으로 입주비용 절감 및 학생 주거환경 개선
-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관련 공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
- 취업활동 지원금 제공 및 “원스톱 패키지형 공공고용서비스” 제공
- 비정규직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저임금(25.1%)·비정규직(32.5%) 일자리를 OECD수준(저임금근로자 비중 16.3%, 비정규직 11.8%)으로 감축
- 셰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공급으로 주거 환경 개선
- 지방 고졸생과 저소득계층 우대를 위한 대학 균형선발 의무화 추진
- 저소득층 대학등록금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및 환급

○ 정의당의 청년 관련 공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년고용할당제 실시
- 취업청탁 금지, 표준이력서 사용
- 청년 디딤돌급여 도입
-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 5시 퇴근법 도입
- 모든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 모든 노동자에게 여름휴가를
- 공공기관 행정인턴제도 폐지
- 근로감독관 2배 증원, 나쁜 일자리 검색제도
- 청년 일자리에 대한 각종 차별 금지
- 월세 공정임대료 실현
- 월세 보증금 안심대출
-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원룸 공정관리비 실현
- 국가표준 등록금 도입
- 등록금 심의위원회 학생대표성 확보
- 정부책임형 대학구조개혁
- 국회 미래세대특별위원회 설치
- 풀뿌리 청년 활동지원

② 분석

- 새누리당의 청년 정책은 일자리, 주거, 대학생 관련 공약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청년국제 인턴 확대 등 기존에 많은 비판에 직면했던 청년 정책이 그대로 들어있다. 결정적으로 현 정부의 노동개혁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귀결된다.
 - 특이점으로는 청년기본법 제정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점이다. 청년기본계획의 근거를 만들겠다는 부연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음.
-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정책은 전체적으로 일자리 중심 공약으로 70만 청년 일자리를 앞장 세우고 있다.
 - 청년 일자리 70만개의 근거는 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37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 고용비율을 약 10%까지(OECD 평균 수준의 절반) 단계적으로 증원하여 34만8천개의 일자리 창출.
- 정의당의 청년 정책 역시 일자리, 특히 임금노동 중심의 고용창출 정책을 중심에 두고 있다. 그 외에 대학 등록금과 대학개혁 문제를 한 쪽지로 다룬다.

③ 비판과 비교

- 새누리당의 청년 정책 공약은 기본적으로 여전히 청년세대에게 ‘일자리’를 가질 것을 강조

하는 기조의 정책이다. 그러나 일자리가 크게 늘기 어려운 저성장 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런 접근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출되는 일자리의 수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다.

— 대학 등록금 자체에 대한 언급보다는 이자를 인하는 식의 접근, 주거비 자체에 대한 접근보다는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식의 접근, 일자리 문제와 저성장 시대에 대한 문제의 식보다는 국제인턴, 중소기업 취직자를 장려하는 방식의 접근 등 임시방편적인 공약이 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정책 중 중소기업 취업자 중 저소득층 대상으로 거치 및 상환기간을 추가 연장 허용하겠다는 선별적인 접근을 택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정책 공약은 ‘청년’에게 고용을 할당하거나 주거복지 정책의 새로운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복지의 새로운 수혜 대상으로 등장시키고 있다.

— 녹색당은 저성장 시대의 ‘일’의 영역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해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기본소득’을 청년문제의 중요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기본소득은 청년 정책으로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고용창출’과 ‘기본소득’을 채택한 각각의 정책에 담긴 사회문제 해석의 간극이 명확하다.

○ 정의당의 청년 정책 공약은 민주당의 청년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 청년에게 고용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문제의 해법을 가져가려는 특징이 있다. 청년을 ‘일하는(임금노동) 청년’, ‘취업(임금노동)을 하려는 청년’ 내지는 ‘대학생’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대학생 역시 ‘잠재적 임금노동자’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정의당의 정책은 녹색당 정책에 비해 임금노동 밖의 영역, 대학교육 밖의 영역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녹색당 정책은 청년을 보편적 시민으로 호명하는 특징이 명확하다.

5) 민주주의 회복(정치)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① 각 당의 정책 개요

○ 새누리당의 정치 관련 정책공약은 아래와 같다.

- 새누리당은 3대분야 20대 실천공약 중에서 ‘기본과 원칙의 힘’ 부문에서 공정사회와 함께 정치쇄신을 다루고 있다.
- 국회운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무노동무임금 원칙 실천
: 국회선진화법 개정, 국회의원수당등조정위원회 독립적 설치, 의정활동중단기간 세비 지급 금지,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의원입법 생산성 제고
-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고 윤리심사 강화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선,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 TF 구성 및 교육감 직선제 개혁 사회적 합의 도출

○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민주주의 관련 정책공약은 아래와 같다.

- 더불어민주당은 3대 비전 7대 약속 중에서 ‘국민의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회복’ 분야에서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 테러방지법 개정·보완, 국정원장 탄핵소추대상 포함, 국정원에 대한 외부감독기능 강화로 불법·탈법 행위 방지, 장기적으로 국가정보원을 폐지하고, 대북정보 및 해외정보 담당 ‘통일해외정보원(가칭)’으로 개편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개혁, 감사원개혁
-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 도입, 선거연령 18세
- 정당 고액특별당비 내역 인터넷 공개,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자 500만원 이상 뇌물수수죄 기소범정주의
- 반부패 개혁과 공직윤리 강화로 투명사회와 청렴국가 초석 마련
- 사법정의 구현, 불법사찰, 언론 자유와 독립,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과거사 진실규명

○ 정의당의 정치·민주주의 회복 분야 정책은 아래와 같다.

- 기득권 국회와 무책임 정부를 바꾸겠습니다.
- 국민을 위한 선거개혁으로 양당독점체제 타파
 -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국민 의사를 반영한 국회,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다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 (피)선거연령 인하, 노동자 투표권 보장 등 정치참여 확대
- 국민을 닮은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
 - : 교섭단체제도 개혁으로 다수당과 소수당이 공존하는 정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상설화, 예결특위의 상임위원회 전환
-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책임지는 정부
 - : 국가재난안전협업체계 구축과 고위공직자 관피아 방지, 김영란법 강화로 부정청탁 방지, 문지마 특수활동비 축소, 무분별한 규제완화 반대, 공공기관 개혁 공공성 회복
- 국민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 테러방지법 폐지,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국정원을 해외정보원으로 변경
-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찰과 도·감청 방지
- 검찰과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

② 분석

- 새누리당의 정치쇄신 관련 공약은 큰 틀에서의 선거제도개혁에 관한 내용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정치쇄신을 구조와 시스템이 아닌 국회의원 개인 차원의 사안으로만 환원해서 개별적인 개선 방안만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
- 또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미명 하에 타 정당에서는 포함하고 있지 않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제안을 주장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개혁과 관련하여 지역주의 극복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 도입을 정책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비례대표 의석비율 확대는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의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석패율제도 도입을 다시 주장하고 있다.
- 또한 가장 우선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국정원 개혁에 관해서도 테러방지법 ‘폐지’가 아닌 ‘개정·보완’ 입장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언론, 공직, 사법 등 각 분야의 윤리강화를 나열하고 있지만, 정작 의회 민주주의와 국회의원 및 정당의 부패를 제지할 방안에 대해서는 극히 미온적인 공약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기득권 양당에 비해서는 선거제도개혁과 민주주의에 부응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별도로 <대한민국 5대 기득권 해체>의 하나로 정치 기득권 폐지와 관련하여 불량정치 퇴출, 세비 최저임금연동제, 교섭단체 기득권 폐지 등을 제안하고 있다.
- 그러나 정의당의 경우 정책공약은 풍부하지만 실제 19대국회 기간 동안 국회의원 기득권에 관한 실질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 또한 정의당의 정치·민주주의 정책공약은 정당 중심의 대의정치를 기본 전제로 깔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에 관한 내용과 시민참여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못하며, 청소년의 정당 활동과 정치적 시민권 보장에도 소극적이다. 또한 제20대 총선 이후 대선으로 이어지는 시기의 정치개혁과 개헌 논의에 관한 과정에 관한 언급도 찾아보기 어렵다.

③ 비판과 비교

- 새누리당은 왜곡된 국회 구조를 바꾸고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의지와 큰 그림 자체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지지하고 있으나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확대에 미온적이며, 타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에 앞서 국회의 무능과 부패를 해결할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 정의당은 기득권을 타파하는 정치개혁·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정당과 국회의원으로만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기본권 즉 참정권을 최대한 확장하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청소년과 청년에게 정치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에 소홀하다.
- 녹색당은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국회 구성 자체를 바꾸어 정의로운 정치참여구조 필요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윤리 강화 및 기득권 정당을 유지시키는 보조금제도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 또한 추천제를 통한 시민의회 구성해 시민들이 스스로 다스리는 시민권력을 형성하는 직접정치의 통로를 마련하고, 국가 참여예산제를 포함 자치의 확장을 제안하고 있으며, 선거권 연령을 만 16세로 확대하여 동료시민으로서 청소년들의 정당 활동과 정치적 시민권을 보장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6) 노동·일자리 정책: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① 각 당의 정책 개요: 새누리당 및 더불어민주당

-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법안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을 노동공약으로 내세웠다. 작년 9월 ‘노동시장개혁 5개 법안’을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주요 노동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4대 입법(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은 우선 추진하고, 기간제법은 추후 추진하겠다고 정책공약집에서 밝혔다. 5개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해서 명시, 노동시간 유연화
- 기간제법 개정안: 기간제 근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 파견법 개정안: 법상 허용된 파견근로 가능 직종을 제조업과 ‘뿌리산업’으로까지 확대
- 고용보험법 개정안: 실업급여 하한액 삭감, 보험가입기간 180일에서 270일로 강화
- 산재보험법 개정안: 출퇴근 시 재해도 산재에 포함

-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노동공약은 아래와 같다.

- 노동시간 단축 관련 공약
 - 주40시간 법정노동시간 준수 등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11만 8천개의 일자리를 창출
 - 휴일 포함 1주 52시간 이내 근로 법정화
“칼퇴근 법”으로 “저녁과 주말”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자 임금격차 완화 관련 공약
 - 생활임금제 확산
 - 최저임금(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 ‘비정규직 사용부담금제’ 도입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 최대 1,200만원(1인) 지원
 - 3同원칙(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 법제화
- 비정규직 관련 공약
 - 상시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 의무화 추진
 - 도급과 파견의 기준 마련 및 노무도급 금지 등으로 대기업의 불법파견 근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 적용확대 및 고용보험 적용제도 도입

② 분석

- 새누리당 공약은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전반적인 고용유연성을 확대하는 기조로 되어 있다. 개정안들이 모두 임금, 노동시간, 고용에 있어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 더불어민주당의 노동시간 단축 관련 공약은 “주40시간 법정노동시간 준수”, “휴일 포함 1주 52시간 이내 근로 법정화” 등 현재의 노동시간 규정을 크게 바꾸지 않고 준수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 다만, 주말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 1주당 12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고용노동부의 해석상 문제(연장근로시간에 주말근로시간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법 규정 해석)를 명료화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의 노동자 임금격차 완화 관련 공약은 노동자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생활임금제 확산, 최저임금 1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비정규직 사용부담제,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 경제적 접근, 임금차별 금지에 대한 법제화 등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③ 비판과 비교

○ 새누리당 공약에 대한 비판

- 한국 노동시장은 과도하게 유연화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준다면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녹색당이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고용을 원칙화하는 공약을 내세운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있다.
- 새누리당의 기간제법 개정안은 기간제 2년을 4년으로 확대함으로써 기간제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 기간제 남용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 또한 파견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자리를 파견직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중간착취를 폭넓게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나, 1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상쇄시키는 개악안이 포함되어 있다.
- 새누리당의 노동 공약은 ‘노동’의 관점이 아니라 ‘자본’의 관점에서 서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 개혁이 아니라 노동시장 개악에 해당한다. 현재 한국 노동시장의 상황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의 노동시간 단축 관련 공약 비판

- 녹색당은 노동시간 단축 관련 1주 기준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

근로시간도 12시간에서 10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주말근로시간을 연장근로 10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 더불어민주당은 기준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 규정을 그대로 둔 채 주말근로시간만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법개정을 공약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미온적인 대처로는 OECD 회원국 중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있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시키기에 미흡할 수밖에 없다. 기준근로시간 자체를 단축하는 보다 상징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더불어민주당의 노동자 임금격차 완화 및 비정규직 공약 관련

- 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직 사용부담금제와 정규직 전환 지원금제를 통해서 임금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으로는 비정규직 남용 실태를 개선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부분적인 개선효과를 볼 수는 있겠으나 잘못된 비정규직 고용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에는 부족하다.
- 녹색당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고용을 원칙화하고, 간접고용 남용을 막기 위한 ‘사용자’ 개념 확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근로자’ 개념 확대 등을 법제화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법제도적 접근을 통할 때만 비정규직 남용을 막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도 상시적인 업무는 정규직 고용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불법파견을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간접고용 대책이다. 특수고용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했지만 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해서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비정규직 공약은 현재보다 진일보한 것이지만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다루지는 못했다.

7) 여성·성평등 정책: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① 각 당의 정책 개요

○ 새누리당의 관련 공약은 아래와 같다.

- 20대 실천공약 내에서는 ‘우리가족 일자리—여성’, ‘맞춤형 복지—우리가족’, ‘맞춤형 복지—우리아이’의 일부로 관련 정책공약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 ‘우리가족 일자리—여성’에서는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활성화를 내용으로 한다.
- ‘맞춤형 복지—우리가족’에서는 경력단절주부와 청년 취·창업자 등에게도 국민연금 혜택 확대, 임신·출산·육아관련 서비스 원스톱 제공, 직장인 학부모도 가능한 학부모 학교참여 휴(공)가 제도 도입 추진, 가족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 확대를 제시하였다.

○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은 아래와 같다.

-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라는 틀에서 분야별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 남녀함께 행복한 실질적 성평등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양성평등기본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성평등 정책 실효성 제고,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여성대표성 제고(고위직 양성평등임용지침 마련, 남녀동수실현을 위한 법제화 추진), 양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
- 차별없는 여성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직장내 성차별에 대한 근로감독 및 차별시정 강화,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보장 및 고용보험 적용, 경력단절여성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및 기능 확충, 여성청년 고용의무할당제 도입 및 창업여성에 창업훈련 및 컨설팅·인큐베이팅 지원 확대
- 일·가족·생활의 균형을 실현하겠습니다.
-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취학자녀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3개월 유급휴가를 주는 ‘취학자녀돌봄휴가제’ 도입,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이돌봄체계 강화, 단시간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적용 사각지대 해소 통해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일·가족 양립 정책 개선
- 여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가정폭력 초기대응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로 성산업 및 성착취 근절,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몰래카메라 이용범죄 및 스토킹·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② 분석

- 각 정당의 성평등 정책공약을 살펴보는데 있어서는 각 세부 정책과제의 제시여부 및 내용 점검에 앞서 먼저 검토되어야 할 몇 가지 지점이 있다. 첫 번째는 전체 목표에의 성평등 포함여부, 두 번째는 전반적인 성 인지적 관점의 적절성,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적 실천의지가 그것이다.
-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 목록에 별도 성평등 정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제20대 총선정책공약집에서 발표한 3대 분야 20대 실천공약에서도 성평등 정책은 찾기 어렵다. 정책공약집 내용에 ‘성평등’이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 새누리당이 여성정책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여성은 ‘일하는 엄마’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 주부’ 뿐이며, ‘가족’이라는 제한된 틀에서만 여성을 바라보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관련해서도 주로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다문화가정 아동 교육 지원만을 주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나 성 주류화 정책도구 강화, 여성대표성 확대 정책공약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못하며, 특히 새누리당은 여성들의 요구를 담은 시민사회의 젠더 정책질의를 아예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 목록에서 ‘더불어 행복한 실질적 성평등사회를 만들겠습니다.’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이 제시한 3대 비전, 7대 약속에서는 별도 성평등 정책공약이 드러나지 않고,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내용으로 다양한 세부 정책과제를 두루 제안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성평등 정책 발표를 통해 “함께 사는 대한민국, 더불어 성평등 국가”라는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성평등 정책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으로는 그간 요구되었던 세부 정책과제가 두루 포함되었지만, 보육 국가책임은 복지보다는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라는 틀 안에서 먼저 바라보고 있다. 또한 여성의 임신출산결정권과 낙태죄 폐지와 같은 민감한 쟁점은 언급을 피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은 여성들의 요구를 담은 시민사회의 20대 젠더정책과제에서 첫 번째로 제시한 요구인 ‘성평등기본법’으로의 전면개정에 찬성으로 응답을 하고도, 그 직후 발표된 총선정책공약집에서는 말을 뒤집어 ‘양성평등기본법의 성공적 시행’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
- 또한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의사결정분야 남녀동수 실현 법제화 등을 제안하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못하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이 확정 발표한 비례대표 명부를 보면 남성후보 당선안정권 배정을 위해 공직선거법상에서 명시하고 있는 비례대표 명부 흡수순번 남녀교호순번제까지 어겼다. 총선 정책공약에서 내용도 진정성도 없이 ‘의사결정분야 남녀동수 실현 법제화’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무색한 일이다.

③ 비판과 비교

- 녹색당은 정책공약의 5대 기조 및 방향에서 ‘서로 존중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평등한 호혜 공동체 구성’을 설정하고, 11대 핵심의제에 ‘차별 없는 평등사회’를 제안하고 있다. 특히 성평등 정책을 6개부문 22개 의제의 부문별 칸막이를 넘어 각 의제를 가로지르는 관점과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으며, 성평등을 사회적 목표로 제안하고 있다.
- 녹색당은 성평등 목표의 실현을 위해 ‘일터에서의 성별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자여성의 안녕한 삶을 보장한다’, ‘다양한 가족형태의 존중과 서로 돌보는 ‘평등 돌봄’을 실현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여성의 삶터를 만든다.’, ‘농촌을 살리는 농민여성에게 권력을’, ‘사회적 목표로서의 인권과 민주주의, 성평등을 다시 쓴다.’를 기치로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하면서, 근본적인 성평등 전환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 또한 실제 2016년 총선 후보 공천과정에서 득권 정당들이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여성배제의 구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남녀교호순번제를 넘어서 비례후보 여성우선 순위배정 규정을 이행하고, 여남동수제를 통해 정당 내부로부터 성평등을 관철하고 있다.

8) 차별금지법 · 동성혼 법제화(성소수자정책)/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① 각 당의 정책 개요

-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성소수자 인권이나 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 공약을 찾아볼 수가 없다.

② 분석

- 최근 한국 사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과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는 2015년 10월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에서 “한국정부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 및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편승하여 20대 총선 공약에서 차별금지법이나 인권 증진을 위한 공약을 포기하였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정책을 다루는 것 자체를 회피하며, 시민사회와 성소수자 운동이 진전시켜 온 인권의 가치를 후퇴시키고 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외 41개 여성단체의 제20대 총선 핵심 젠더과제 중 하나인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하여 새누리당은 답변을 거부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라고 답변하였다. 더불어민주당(당시 (구)새정치민주연합의 최원석, 김한길)은 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가 스스로 철회하기도 하였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2월 29일 ‘3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에 참석하여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이슬람과 인권 관련 법을 반대한다”고 공표하여, 성소수자 유권자 단체인 ‘레인보우 보트’로부터 낙천, 낙선 대상으로 선정당하기도 하였다.

③ 비판과 비교

- 녹색당은 지난 3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성소수자의 완전한 평등”이라는 정책 기조 하에 10대 핵심의제 공약으로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제도화를 공약하였으며, ▲성소수

자 인권을 지지하는 전국적인 연결망 구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성평등교육법, 교과과정에 성소수자 인권 증진 정책 포함, ▲트랜스젠더, 인터섹스를 위한 교육제도에서 성별중립 지원정책, 성별정정 요건 완화, 의료접근권 보장 ▲HIV/AIDS 감염인 고용 차별금지와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실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등을 공약하였다.

- 녹색당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외 41개 여성단체들로부터 차별금지법 등 핵심 젠더과제에 대하여 찬성의 이유와 근거, 젠더정책의 입장을 가장 자세하게 기술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녹색당의 성소수자 정책공약은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외 성소수자 인권단체들로부터 성소수자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이 심도 깊게 담겨 있다는 평가와 지지를 받았다.

9) 설악산 케이블카·평창동계올림픽(산지개발정책):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① 타 당의 정책 공약 개요

- 새누리당은 산악관광 및 평창동계올림픽 등 산지개발 관련 공약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문화체험·산악관광 인프라 조성, 지방관광 활성화, 교통시스템 구축
- 자연친화적 산악관광 진흥
 -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규제 합리화, 자연친화적 산악관광 추진 근거 마련
 - 국립공원과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을 제외하여 산림훼손 최소화
 - 임도를 활용하여 트레킹 코스, 산악자전거길 조성
 -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여 스포츠파크, 힐링파크, 친환경농축산 테마체험 시설조성

- 더불어민주당은 산악관광 등 산지개발 혹은 개발 규제와 관련된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② 분석

- 설악산국립공원지킴이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은 지난 2월 18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 6개 정당에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여기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았다.

③ 비판과 비교

- 새누리당은 산악관광 정책을 공약하면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등과 같이 생태계가 잘 보전된 지역의 난개발을 야기할 것이라는 비판을 무시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은 자당의 최문순 도지사가 강행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등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최문순 도지자사의 측근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등에 앞장 선 심기준(더민주 강원도당 위원장)을 비례대표 14번으로 공천하여 시민 사회의 비판을 무시하고 있다.
- 녹색당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포함하여 무분별한 산지개발 사업을 중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10) 동물복지·동물권 정책: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① 정책

○ 새누리당의 동물복지 관련 정책은 아래와 같다.

-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
- 민간분야 동물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
- 제도적 시스템 보완을 통한 활성화 저해 걸림돌 제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록정보로 개체별 신원확인이 가능하게 하여 보험금 부담 청구 예방장치 마련
- 보험가입시 인센티브 제공, 보험가입과 동물등록을 함께 하는 경우 등록비용 지원
- 수의사와 동물보유자의 결탁을 통한 보험금 부당수령 방지방안 연구용역추진

○ 더불어민주당의 동물복지 관련 정책은 아래와 같다.

반려동물 등에 대한 동물복지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지자체별 반려동물 전용 놀이공간 설치 추진
-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 설치
- 유기동물보호소 지방자치단체 직영 운영 강화
- 각 지방자치단체 별 유기동물보호소 및 의료진 확충
- 반려동물 분양업을 허가제로 전환
- ‘종견장’(피피밀)에 대한 사육환경 및 동물복지 기준 강화를 위한 ‘허가제’ 실시
- 불법 종견장에 대한 단속 강화

② 분석

○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반려동물 외에 공장식 축산이나 동물실험, 동물원 등 동물착취 산업에 대한 규제, 야생동식물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이 전혀 없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반려동물 정책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들은 생략한 채 여전히 인간 중심의 미시적 접근을 보여주는 정책이다.

③ 비판과 비교

○ 녹색당은 20대 총선 10대 공약으로, 동물을 단순히 이윤추구의 대상, 물건으로만 취급하는 관점을 지양하고,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생명으로 존중하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기초 하에 동물권 보장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 녹색당의 동물권 정책공약에는 ▲헌법에서의 ‘동물보호의무’ 명시 및 민법상 동물을 물건 아닌 생명으로 명문화 ▲유기동물수의 근본적 감소 ▲동물학대적인 번식업 및 판매업 규제 ▲길고양이 급식소 확대, 인도적 중성화(TNR) 사업 ▲공장식 축산에서 동물복지 축산으로 전환 ▲동물습성에 반하는 이용행위 규제 기본법 ▲동물실험 10년 내 50% 감축 ▲동물원 사육환경에 엄격한 기준 ▲야생동식물 서식지의 보존 및 복원을 위한 도로의 재자연화, ▲고래류의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녹색당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외 국내 주요 동물보호단체들로부터 동물권과 생명권에 관한 정책공약이 어느 정당보다도 세밀하고 전위적이어서 다른 정당들과 매우 큰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와 지지를 받았다.

11) (초)미세먼지 정책/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① 정책

○ 새누리당의 미세먼지 정책 공약은 아래와 같다.

-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제고, 3대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한중 협력강화
-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제고하고 국내 대기질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추진(~'20년)
- 오염의 50-70%를 차지하는 3대 국내 배출원(자동차, 사업장, 생활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축 정책 추진
- 전기·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보급(~'24 200만대) 확대
-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한 72대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량 감축(~'17년)
- 대형 직화구이 음식점(300㎡이상)의 미세먼지 관리규정(안) 마련 등 생활오염원 관리
- 중국 등 국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실시간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 중국 내 제철소에 저감시설 설치, 공동 연구 등 협력 강화

○ 더불어민주당의 (초)미세먼지 정책 공약은 아래와 같다.

-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발생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초)미세먼지 측정망확대 및 전문인력 보강 추진과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 산업시설이 집중된 미세먼지 발생 우심지역에 대해서 특별관리 실시
- 미세먼지 과다발생이 우려되는 교통량이 집중된 곳에 학교, 유치원, 요양시설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 기존 시설들에 대해서는 방음벽 설치, 공기청정기 보급
- 학교버스, 학원버스를 CNG로 교체해서 어린이들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 실현
- 대중교통(지하철)이용 승객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공공 교통시설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② 분석

○ 새누리당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지속적 감축을 거론하고 있지만 기술적 해결책(전기자동차) 및 자별적 협약의 정책 수단만을 주로 제시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발생 우심지역에 대한 특별 관리를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마스크 지원, 학교 등의 입지 관리, 학교버스 등의 CNG 버스로 교체 등의 사후적·임시방편적 정책을 나열하고 있다.

③ 비판과 비교

-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미세먼지 정책은 위험성이 더 큰 초미세먼지 문제를 구분하고 있지 못하며, 체계적·구조적인 접근보다는 사후적·임시방편적 접근에 머물고 있다.
- 녹색당은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를 구분하며, ▲배출원의 근본적 저감(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실시유예 중단, 노후 자동차 조기 폐차 정책 강화 등), ▲긴급 대처(초미세먼지 주위보/경보 단계에서의 자동차 2부제 실시 강화 등) 그리고 ▲(초)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구축(관리기준의 강화, 측정소 확대 및 측정 높이 조정 등) 등, (초)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체계적·구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2) 평균월급 300만원 vs 기본소득 40만원: 정의당

① 정책 개요

- 평균 월급 300만원 공약은 임금 구간별 평균임금을 4년 동안 단계적으로 똑같이 70만원씩 인상해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300만원을 달성하자는 것⁶⁾으로 정의당의 핵심적인 정책공약이다.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2015년 8월 현재 약 1900만 명의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은 월 230만원이다.
- 전체 임금노동자를 저임금(133만원) 이하, 저임금~중위임금(133~200만원) 사이, 중위임금~평균임금(200~230만원) 사이, 평균임금(230만원) 이상 노동자 집단으로 나누고, 아래와 같이 2020년까지 모든 구간의 노동자들의 임금 총인상액을 일률적으로 70만원 인상(즉, 각기 상이한 비율로 임금 인상)하여 평균 임금을 300만원으로 만들겠다는 정책이다.
- 이와 같은 임금인상으로 노동자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 내수가 살아나고 다시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이윤주도 경제에서 임금주도 경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월급 300만원 공약에 따른 4년 후 임금구간별 변화]

현재(2015년 기준)			4년 후(2020년 기준)		
구분	인원	2015년	2020년	총인상액	연평균인상률
저임금 이하	492만명	85만원	155만원	70만원	16.2%
전일제	288만명	106만원	176만원	70만원	13.5%
시간제	204만명	57만원	127만원	70만원	22.2%
저임금~중위	599만명	171만원	241만원	70만원	8.9%
중위~평균	73만명	216만원	286만원	70만원	7.3%
평균 이상	767만명	369만원	439만원	70만원	4.4%
합계/ 전체평균	1,931만명	230만원	300만원	70만원	6.9%

- 이를 위해서 제시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❶ 평균월급 300만원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정책 2가지

- 첫째, 최저임금의 인상과 실질적인 적용 확대 정책

6) 정의당, 『국민월급 300만원과 복지임금 100만원, 어떻게 가능한가』, 20대 총선 대표공약 간담회 자료집(2016. 3. 2) 가운데.

— 둘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한 좋은 일자리 정책

② 평균월급 300만원을 위한 종합 대책 3가지

— 첫째, 중소기업 등 자영업자 종합대책과 병행 추진

— 둘째,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셋째, 재벌개혁과 함께, 노동자 및 상인 단체의 교섭권 강화

② 분석

○ ‘국민월급 300만원론’은 한마디로 모든 임금노동자(1,900만 명)의 임금을 2020년까지 70만원씩 올리자는 것인데, 이는 정의당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듯이 소득주도성장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③ 비판과 비교

○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소득불평등의 심각성과 이를 임금상승으로 완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불평등의 완화가 경제성장과 연결된다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에도 회의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토론한 바가 있다.

○ 임금노동자 평균 월급 300만원 vs 모두에게 기본소득 40만원

— 모든 시민이 아니라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모두 300만원이 아니라 평균 3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선언보다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모두 4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더욱 호혜적이고 민주적이며 실현가능한 정책이다.

6. 요약 및 정리_녹색당의 정책 포지션

1) 성장추구 vs 탈성장 추구 // 선별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



- 각 당의 정책 기조와 방향 그리고 개별 정책을 검토하여 녹색당과 타 당의 정책 포지션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 새누리당은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도 선별적인 복지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론을 천명하면서 보편적인 복지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정책적 포지션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며,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와 해결 의지면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뚜렷하게 구분된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론에 기반한 경제성장주의를 공유하고 있는 점에서 근본적 차별성을 가지기 어렵다.
- 한편 정의당과 녹색당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진보정당’으로 함께 분류될 수 있겠지만, 정책 포지션에서 분명하게 구분되는 차이가 있다. 두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 우선 정의당과 녹색당은 경제성장에 대한 태도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지

고 있다. 정의당은 새누리당과는 다른 방식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며 또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녹색당은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며 꼭 그래야 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이다. ▲ 둘째 정의당은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반면, 녹색당은 임금노동 밖에서도 일정한 소득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 점은 임금 노동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강조점을 두는 정의당과 임금노동 이외의 다양한 일의 가치를 발견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녹색당의 정책적 강조점 차이로도 드러난다.

2) 거대 기득권 정당(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녹색당의 차이

- 녹색당은 ▲ 에너지·기후변화, ▲ 노동·일자리, ▲여성·성평등, ▲ 청년 그리고 ▲ 직접 민주주의와 정치참여 확대 부문에서 새누리당의 퇴행과 더불어민주당의 우유부단함에 맞서, 근본적인 개혁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① 에너지·기후변화

새누리당 공약의 문제점	더민주당 공약의 문제점	녹색당의 비판과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발전소 축소 정책에 대해서 반대 ▲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없음 ▲ 전기/에너지요금 정책 입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발전소 위험 인식 부족과 모호한 탈핵 입장 ▲ 2035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0%로 확대 ▲ 전기/에너지요금 정책 입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원전 건설 및 노후원전 즉각 중단(2030년까지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0%로 확대 ▲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 및 에너지요금의 사회적·환경적 비용 반영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설정 필요성 불인정 기존의 에너지다소비/수출 산업구조 전환 필요성 인식 부재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재설정과 경제의 녹색화 전략 제시

② 노동·일자리

새누리당 공약의 문제점	더민주당 공약의 문제점	녹색당의 비판과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노동시간, 고용의 유연화를 심화시키는 반노동적 공약이며, 기업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시간 노동, 비정규직 남용을 해결 방향은 정당하지만, 실효성을 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화 ▲ 근로자, 사용자 개념확대

이해관계가 전적으로 반영됨.	기에는 미온적인 공약	를 통한 간접고용, 특수 고용 문제 근본적 해결 ▲ 기준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장시간노동 관행 근절
-----------------	-------------	---

③ 여성·성평등

새누리당 공약의 문제점	더민주당 공약의 문제점	녹색당의 비판과 대안
▲ 여성을 가족의 틀 안에서만 정책대상으로 설정	▲ 백화점식으로 거의 모든 정책을 나열하면서도, 쟁점이 되는 정책은 피해가는 태도	▲ 성평등 관점에서 쟁점이 되는 정책(차별금지법, 임신출산자기결정권 등)을 정면으로 제기 ▲ 농민여성 등 그동안 충분히 포함하지 못한 여성들에 대한 정책 강조
입닫고 귀 닫는 성평등 정책 모르쇠	말만 많고 실천은 없는 눈속임 ‘양성평등’	불평등사회 뒤집어 여성‘들’의 삶을 전환

④ 청년

새누리당 공약의 문제점	더민주당 공약의 문제점	녹색당의 비판과 대안
▲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정부의 노동/경제 정책과 연동되는 형태의 공약	▲ 저성장시대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고, 청년을 복지 수혜대상으로만 해석	▲ 저성장시대의 전체적인 해법 속에서 청년세대에 대한 접근이 필요 함 ▲ 모두에게 조건없이 기본소득: 1단계부터 청년에게 지급 ▲ 정치참여의 확대: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확대 등

⑤ 직접민주주의와 정치참여 확대

새누리당 공약의 문제점	더민주당 공약의 문제점	녹색당의 비판과 대안
▲ 결가지가 아니라 왜곡된 국회 구조를 바꾸고 정	▲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지지하나 비례대표	▲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국회 구성 자체를

치개혁을 하겠다는 의지와 큰 그림 자체가 없다.	의석비율이 확대에 미온적 ▲ 타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에 앞서 국회의 무능과 부패를 해결할 의지부족	바꾸어 정의로운 정치참여구조 필요 주장 ▲ 국회의원 윤리 강화 및 기득권 정당을 유지시키는 보조금제도 개혁요구
----------------------------	---	--

- 한편 ▲교육(배움), ▲ 차별금지법·동성혼 법제화(성소수자정책), ▲ 케이블카(산지개발), ▲ 동물권, ▲ 미세먼지 등의 사회정책 분야의 측면에서 보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단히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녹색당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거대여야 정책연대’에 맞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① 교육(배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녹색당
▲ 기존에 실시중인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불성실함을 보여줌	▲ 교육기회를 보장하면 신분상승이 가능하다는 신화에 사로잡혀 있음	▲ 사회경제적·생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을 새롭게 재구성
교육을 계층이동의 수단, 자유주의적·도구주의적 접근		

② 차별금지법·동성혼 법제화(성소수자정책)

새누리당 공약의 문제점	더민주당 공약의 문제점	녹색당의 비판과 대안
▲ 차별금지법이나 종합적인 인권 정책 공약이 없음. ▲ 시민사회와 성소수자 운동이 진전시켜 온 인권의 가치를 후퇴시키고 있음.		▲ 3월 4일 “성소수자의 완전한 평등”을 기자회견 개최 ▲ 11대 핵심의제 공약으로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제도화 등을 공약함.
성소수자 차별로 “거대여야 정책연대” 실현		

③ 케이블카(산지개발)

새누리당 공약의 문제점	더민주당 공약의 문제점	녹색당의 비판과 대안
▲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 제시하는 공약 없음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포함하여 무분별한 산지 개발 사업을 중단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및 (암묵적) 지지로 “거대여야 정책연대”를 실현		

④ 동물복지·동물권

새누리당 공약의 문제점	더민주당 공약의 문제점	녹색당의 비판과 대안
▲ 반려동물 정책 이외에 공장식 축산이나 동물실험, 동물원 등 동물착취 산업에 대한 규제, 야생동식물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이 전혀 없음.		<p>▲ 헌법에서의 ‘동물보호의무’ 명시 및 민법상 동물을 물건 아닌 생명으로 명문화</p> <p>▲ 공장식 축산에서 동물복지 축산으로 전환, 동물습성에 반하는 이용행위 규제 기본법, 야생동식물 서식지의 보존 및 복원을 위한 도로의 재자연화 등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전환을 공약</p>
인간 중심의 미시적 접근을 보여주는 정책 동물권에 대한 무지로 “거대여야 정책연대” 실현		이윤추구의 대상 및 물건으로 취급하는 관점을 지양

⑤ 미세먼지

새누리당 공약의 문제점	더민주당 공약의 문제점	녹색당의 비판과 대안
▲ 기술적 해결책(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기업들의 자발적 감축 지원 등 중심	<p>▲ 미세먼지 발생 우심지역 특별관리(그러나 구체 방안 제시 없음),</p> <p>▲ 마스크 지원, 학교 등의 입지 관리, 학교버스 등의 CNG 버스로 교체 등 중심</p>	<p>▲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구분 접근</p> <p>▲ 배출원의 근본적 저감(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실시유예 중단, 노후 자동차 조기 폐차 정책 강화 등),</p> <p>▲ 긴급 대처(초미세먼지 주</p>

		위보/경보 단계에서의 자동차 2부제 실시 강화 등) ▲ (초)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구축 (관리기준의 강화, 측정소 확대 및 측정 높이 조정 등)
사후적·임시방편적 접근에 머물렀던 “거대여야 정책연대” 실현		체계적·구조적인 접근

3) 정의당과 녹색당의 차이

- 정의당과 녹색당은 많은 정책 쟁점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 교육(배움), ▲ 청년, ▲ 직접민주주의와 정치참여 확대, ▲ 평균월급 300만원 vs 기본소득 40만원 등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① 교육(배움)

정의당	녹색당
▲ 진보정당으로서의 교육문제에 대한 성찰과 장기적 비전, 큰 밑그림을 그려내는 역할에서 대폭 후퇴, ▲ 한국 교육의 모순과 교육으로부터 발생하는 고통에 대한 성찰보다 현상적으로 드러난 교육 문제에 대한 단편적 대응 중심의 정책. ▲ 교육문제의 고통을 비용과 복지 문제로 환원	▲ 한국의 교육문제를 진단하고, 변화의 큰 밑그림을 그렸음. 단기적 장기적 과제로 나누고, 교육 문제를 가르침의 영역에서 배움주체 권능 부여라는 전환의 관점을 제시 ▲ 단기적 과제로 청소년 수면시간 보장과 학교급식안전, 정치적 권리 보장 등으로 배움주체의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을 ▲ 장기적과제로 교육과정의 전면적 개혁을 통한 학교 일상의 재구성, 교육부 폐지와 지방 분권, 학교 자치 등 교육개혁의 큰 밑그림을 그려냄

② 청년

정의당 공약	녹색당 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할당제 등 고용 창출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해법을 제시 ▲ 임금노동하는 청년, 임금노동을 준비하는 청년, 임금노동을 준비하는 대학생이 정책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성장 시대 사회와 청년의 새로운 대안적 계약을 제안 : 기본소득 ▲ 정치참여 확대를 통한 보편적 시민으로 호명 ▲ 학교 밖, 노동시장 밖 청년 등 기존의 시스템을 넘어서는 다양한 삶을 포괄적으로 호명하는 관점 유지

③ 직접민주주의와 정치참여 확대

정의당 공약	녹색당 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득권을 타파하는 정치개혁·선거제도 개혁을 정당과 국회의원으로만 한정 ▲ 민주주의는 정치적 기본권 즉 참정권을 최대한 확장하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청소년과 청년에게 정치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에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첨제를 통한 시민의회 구성해 시민들이 스스로 다스리는 시민권력을 형성하는 직접정치의 통로 마련 필요성 주장 ▲ 국가 참여예산제를 포함 자치의 확장 제안 ▲ 선거권 연령을 만 16세로 확대하고, 동료시민으로서 청소년들의 정당활동과 정치적 시민권을 보장

④ 평균월급 300만원 vs 기본소득 40만원

정의당 공약	녹색당 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노동자 평균 월급 300만원 ▲ ‘평균’을 통한 접근의 위태로움_불안정·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및 소득 보장이 최우선 과제가 되지 않는가. ▲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이들 그리고 임금노동을 하지 않는 이들은 부가적인 정책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에게 기본소득 40만원 ▲ 임노동의 속박에서 벗어나서도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소득 도입. ▲ 청소년·청년, 농어민, 장애인, 노인에게 월 40만원 기본소득 지급하고 전 연령대로 확대. ▲ 기본소득은 주거, 의료, 교통, 교육, 식량 등 보편적 권리보장과 병행되며 기본소득의 재원은 보편적 증세로 마련.

별첨 1. 4개 정당 10대 공약(선관위 제출) 비교 - 녹색당 의제를 중심으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1. 탈핵 기후보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40년까지 원전의 점진적 축소를 통한 한국탈핵 실현
2.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희망아카데미 전국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기회 확대 어르신 일자리 대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청년구직활동 보장 위한 청년 안전망 구축 청년창업환경 개선 노동자간 임금격차 완화 생활임금제 확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비정규직 사용부담금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처우 법제화 보수 공시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회의소 설립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 청년고용할당제 기간제 근로자 사용 휴지기 도입 불법 파견, 사내하청 근절 파견사업자 수수료 인하 감정노동자 기살리기 하도급업체 임금 체불 방지 출산휴가, 육아휴직 확대 공정임금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까지 국민 평균월급 300만원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CEO 임금상한제 원하청 초과이익공유제 성별, 고용형태별 차별금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실업부조 비정규직 사용제한 공공부문, 대기업 정규직 전환 5시 칼퇴근법 연 30일 이상 유급휴가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감정노동자 보호 공기업·대기업청년고용할당제와 기회균형채용 청년디딤돌급여 지급
3. 농어업 먹거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쌀지키기 농·임·축산·수산업 정책자금 인하 5대 민감품목 지역생산 할당제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 수산직불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량자급률 50%, 적정농지 확보 법제화 농가소득 보장과 교육복지 투자 미래산업·뿌리산업 전략적 배치 GDP 10% 수준을 목표로 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원 보험 의무가입 확대 ▪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 ▪ 식품구제위원회 설치 ▪ 식품위생법 강화 ▪ 안전한 수돗물 공급 ▪ 수산물 이력제 의무실시 	<p>뿌리 사회적경제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대 균형발전, 공공병원 확충
4. 성평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기본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성평등 정책 실효성 제고 ▪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제정 ▪ 여성대표성 제고 ▪ 양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 ▪ 남녀동행을 위한 남녀동수 실현 법제화 추진 ▪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과 ‘생활임금제 확산’으로 임금격차 해소 ▪ 임신, 출산 등에 의한 불이익 등 직장내 성차별에 대한 근로감독 및 차별 시정 강화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보장 및 고용보험 적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및 기능 확충 ▪ 창업여성에 창업훈련 및 컨설팅·인큐베이팅 등 지원 확대 ▪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감정노동자 기살리기 ▪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복귀 지원 ▪ 성평등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 ▪ 가정폭력 예방 ▪ 성범죄 피해자 보호 ▪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 강화 ▪ 산모전담 간호사제 도입 ▪ 한부모 양육비 안정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종사자 임금인상, 좋은 일자리 보장 ▪ 일가정 양립 정착으로 여성경력단절 해소 ▪ 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 직장내 성희롱예방 강화 ▪ 데이트폭력, 스토킹, 온라인폭력 대응 ▪ 과도한 미용·성형산업 및 과장광고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취학자녀돌봄휴가제’ 도입 ▪ ‘칼퇴근법’으로 ‘저녁과 주말’을 가족과 함께 ▪ 단시간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적용 사각지대 해소 ▪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이행 촉구 ▪ 촘촘한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및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 및 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 가정폭력 초기대응 및 가해자 처벌 강화 ▪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성매매 유입된 아동, 청소년 ‘피해자’ 규정,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 일본군위안부 합의 철회 및 재협상 ▪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 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 「가족지원기본법」 마련,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 예방 및 지원 		
이주민	×	×	▪ 장애인 소득 보장	▪ 장애인등급제폐지, 장애인권

장애인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염전노예방지법 추진 ▪ 차별없는 교육 ▪ 장애인 이동권 	리보장법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탈시설·지역거주 종합정책수립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의무고용제 개편으로 새로운 고용모델 발굴 ▪ 이주여성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 ▪ 미등록 이주아동, 무국적 아동의 권리보장 ▪ 파트너십제도,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 혐오표현·범죄 처벌 법제화,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제정 ▪ 인권교육기본법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내 인권교육원 설치 ▪ 차별금지법 제정
5. 주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집 리모델링으로 1~2인 가구 임대주택 지원 ▪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및 공공실버주택 조성 ▪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 관리사각지대 해소 ▪ 대학 연합 기숙사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기금 공공임대주택 투자 ▪ 장기공공임대주택 85만호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 5,600개 확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비지원 확대 및 반값임대공정주택 연간15만호공급 ▪ 전월세상한제도입, 계약갱신청구권보장, 공정임대료도입 ▪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상시공개 및 분양가상한제 민간아파트 확대
6. 동물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직영 유기동물보호소 확대 	×
7.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 추진 ▪ 무료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 서비스 활성화 ▪ EBS-2TV 본방송 조기실시 ▪ 저소득층 영재 발굴 및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 대학등록금 저소득층 대상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시제도 단순화 ▪ 의무교육 내실화 ▪ 기회균등선발제 확대 ▪ 국공립대 등록금 4년 동결 ▪ 진로진학취업 종합포털 구축 ▪ 창의융합형 자율교육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유치원 누리과정 국가책임제 ▪ 초등학교 2배 확대, 고교무상교육 도입, 대학균형발전, 국가표준등록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따돌림 방지 ▪ 학교중심 지역공동체 복원 ▪ 교원임용 성평등 할당제 		
8. 탈토건 안전사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관리 ▪ 환경피해구제 강화 ▪ 택시 연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강 복원과 지속가능한 물 관리 및 국토환경보호 ▪ 발암물질 관리 강화와 환경유해인자 관리, 환경피해구제수단 강화 	
9. 한반도 비핵평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 튼튼한 안보 구축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당국회담 ▪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개성공단 재가동 ▪ 여·야·정·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통일국민협약 체결 ▪ 환동해·환황해 남북상생 경제협력 사업 ▪ 남북상생경제 3대 SOC사업 ▪ 남북 접경지역 4대 상생특구 설치 ▪ 남북 자원협력 전담기구설치 ▪ 평양·백두산 관광 추진,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 남북 지자체 교류협력 확대 ▪ 한반도 프라이카우프 추진 ▪ 남북 인권협력 추진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광역 지자체별 통일센터 설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환경 조성 중견국 외교 ▪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 정예강군 목표 국방개혁 ▪ 군복입은 시민 권리 보장 ▪ 남북 경협 활성화·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경협사업 손실보상 특별법,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 		
10. 민주주의 회복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인낙하산 방지 국민발안제, 국민파면제 도입 테러방지법 개정 고위공직자 임금상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돈/금수저/부정축재/무자격/부도덕 5대 불량정치 퇴출 국회의원 세비와 고위공직자 보수 최저임금 연동제 선거개혁으로 양당독점체제 타파 국민 신뢰받는 국회 유능한·투명한·책임지는 정부